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45
----------	------

제출일자: 2020. 4. 16.

제 출 자: 광진구청장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광진구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에 대한 재난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을 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재난피해자 정의(안 제2조 개정)
- 나. 사회재난 구호 지원대상 및 결정(안 제4조 개정)
- 다. 생활안정 등 지원내용(안 제5조 개정)
- 라. 지급방법(안 제11조 개정)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나. 예산조치 : 미첨부사유서 첨부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생략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피해를 입은자”를 “직접 또는 간접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18조”를 “제20조”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3. 재난으로 인한 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등(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직접 또는 간접 피해 회복이나 수습 지원(이하 “피해수습 지원”이라 한다.)을 위해 필요한 경우
4. 재난으로 인한 사업장의 일시적 폐쇄 또는 영업의 심각한 피해로 수입 또는 소득이 감소하여 폐업 위기에 있거나 생업 유지가 어려운 경우

제5조제1항제5호를 제7호로 하고,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5. 취약계층의 직접 또는 간접 피해수습 지원

6.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 및 권고에 따라 사회재난 예방을 위한 사업장의 휴원·휴관·휴업(이하 “휴업”이라 한다.)에 대한 휴업 지원

제5조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기존 제3항) 중 “고려하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를 “고려하여 지원의 대상, 방법, 범위, 기간, 수량, 비율, 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로 한다.

제9조 제1항 중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을 “제5조제1항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통장·이장·반장”을 “통장·반장”으로 한다.

제11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화폐나 현물 또는 용역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생활안전 지원 등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원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략)	제2조 (현행과 같음)
3. “재난피해자”란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u>피해를 입은자</u> 를 말한다.	3. ----- ----- <u>직접 또는 간접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u> 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결정)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u>제18조</u> 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결정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및 결정) ①----- ----- ----- ----- ----- <u>제20조</u>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생략)	2. (현행과 같음)
<u>< 신 설 ></u>	3. <u>재난으로 인한 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등(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직접 또는 간접 피해 회복이나 수습 지원(이하 “피해수습 지원”이라 한다.)을 위해 필요한</u>

현행	개정안
<p><u><신 설></u></p> <p>3. 5. 그 밖에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제5조(지원내용) ① (생략)</p> <p>1. ~ 4. (생략)</p> <p><u>< 신 설 ></u></p> <p><u>< 신 설 ></u></p> <p>5.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p> <p>② 제1항 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기준은 다음과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p> <p>1. 장례비 :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p>	<p><u>경우</u></p> <p>4. 재난으로 인한 사업장의 일시적 폐쇄 또는 영업의 심각한 피해로 수입 또는 소득이 감소하여 폐업 위기에 있거나 생업 유지가 어려운 경우</p> <p>5. (현행과 같음)</p> <p>제5조(지원내용) ① (현행과 같음)</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취약계층의 직접 또는 간접 피해수습 지원</u></p> <p>6. <u>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 및 권고에 따라 사회재난 예방을 위한 사업장의 휴원·휴관·휴업(이하 “휴업”이라 한다.)에 대한 휴업 지원</u></p> <p>7.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p>

현행	개정안
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2. 치료비 :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u>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u>	----- ----- ----- ----- -----고려하여 지원의 대상, 방법, 범위, 기간, 수량, 비율, 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u>③ (기존 제2항과 같음)</u>
제9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u>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u> (이하 “생활 안정지원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다만, 재난피해자가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부터 그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 1. (생략) 2. 해당 거주지의 통장·이장·반장 등	제9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u>제5조제1항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u> ----- ----- ----- ----- ----- . 1.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p>② ~ ⑤ (생략)</p> <p>제11조(지급방법) ①(생략)</p> <p><신설></p>	<p>2. 해당 거주지의 <u>통장·반장</u> 등 ② ~ ⑤ (현행과 같음)</p> <p>제11조(지급방법) ① (현행과 같음)</p> <p>② <u>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u> <u>지역 화폐나 현물 또는 용역 등으</u> <u>로 지원할 수 있다.</u></p>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본 조례안에서 규정된 재난 피해자 발생으로 생활안정지원이 실시될 경우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에 해당

제14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사회재난 피해자 구호 및 복구 지원은 재난 발생의 예측이 어렵고 재난의 유형과 피해규모, 범위 등에 따라 비용 규모가 유동적이므로 비용추계는 기술적으로 어려워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재난 발생에 따라 예비비, 기금 등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함.

4. 작성자 : 안전환경국 도시안전과 김시우(02-450-7905)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구호 및 복구 사업 비용의 부담 등) ① 국가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조한다.

1. **생활안정지원**: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

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구호 및 지원

가.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가구 구성원에 대한 생계비 지원

1) 가구구성원 중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실종 또는 부상을 당하여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농업·어업·임업 및 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주거비 지원

1) 주택이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

2) 사회재난으로 피해가 예상되어 주거하던 곳에서 주거가 불가능하게 된 사람

3) 재난 수습을 위하여 주된 거주지에서 이주하게 된 사람

라. 주택이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 또는 주된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없게 된 사람에 대한 구호

마. 고등학생의 수업료 면제2. **간접지원**: 재난피해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농업인·어업인·임업인 및 염생산업인에 대한 자금 융자

나. 농업·어업·임업 및 염생산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융자

라. 주택 복구자금의 융자

마.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또는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3. **피해수습지원**: 사회재난 피해 수습을 위하여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가. 공공시설의 복구

나. 재난피해자의 수색 및 구조

다. 오염물 및 잔해물의 방제 및 처리

라. 합동분향소 설치·운영 등의 추모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에 드는 비용에 대한 재원별 부담기준은 별표와 같다.